

최악 적자 한전...나랏돈으로 손실 메우나

전력업계 안팎 영구채 발행·재정 투입 방안 거론
정부 "검토한 바 없다"...전문가 "전기료 인상 먼저"

올해 1분기만 8조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한전(한전)이 해외 사업과 출자지분,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6조원대 지구채 마련에 나섰다. 다만 한전의 차입금이 50조원을 넘어가 조만간 자본잠식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내놓은 지구채로는 급한 불을 끄기도 벅하다는 평가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연료비를 원가에 반영하거나 전력 도매가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전력판매 시장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한전이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상 첫 영구채를 내자 668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8년 지원 사례와 한전 누적 차입금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5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전력법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 규모는 91조800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을 감소하게 만드는 구조와 올해 사상 최대 적자의 폭을 감안하면 사채발행 규모는 더 쪼그라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만기가 없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

구채는 액면상은 채권이지만 상환의 무가 없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영구채로 인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금+적립금의 2배 규모로 묶인 사채 발행에도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채무 부담은 고스란히 남는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이나 채권 발행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의 체력 회복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조정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재정 투입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원재자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여름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뒤집고, 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물가 압박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이슈가 될 수 있는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언급없이 사실상 '관리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김포와트시(kWh)당 분기 기준 3원, 연간 기준 5원씩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연동제 자체가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작동하지 않아 확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의 상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적자를 발전사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영구채 발행, 연료비 연동제 확대 등 한전 지원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광주은행, 광양시 제2급고 선정

3년 만에 탈환...광주시·5개 구·전남 5개 시 석권

광주은행은 23일 전남 광양시 제2급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3년 만의 탈환으로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광양시의 특별회계와 기금 등 1160억원을 운용한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양시 금고유치전에서 제1급고는 농협, 제2급고는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기여,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용편의성 등 평가항목에서 끝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시 금고와 5개구 금고에 이어 전남 시지역(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금고도 석권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 금융지원으로 선순환토록 해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더 줄인다

기재부, 공시가 환원·공정가액비율 조정 등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유세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는 21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인 46.0%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이 기준 안에서 나아가 2020년 수준까지 종부세 부담을 낮

춰주겠다는 계획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예산치)와 지난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 16.3%인데,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비율을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추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국회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채택하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공시가격(18억 10만원) 기준 종부세는 244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뉴시스

제네시스 GV60

출시 6개월만에 3천대 판매

제네시스 GV60가 출시 6개월만에 국내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대를 기록했다. 23일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제네시스 GV60은 출시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13대가 신차로 등록됐다. 경쟁차종인 벤츠 EQA 1033대, BMW iX3 525대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GV60은 전제 승용 전기차 모델 판매 순위에서도 4위에 올라 3위를 기록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GV60의 주 소비자층은 40~50대다. 특히 40대 남성이 월등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소비능력이 우수한 소비자층에서 GV60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구매자 2119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40대가 683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남성은 482명, 여성이 201명이었다. 50대가 532명으로 25.1%를 차지했다. 50대 구매자 중 남성은 344명, 여성이 188명이었다. 30대는 459명으로 21.7%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은 382명(18%)이었고, 20대는 63명으로 3%에 그쳤다.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개막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2)이 개막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공작기계, 로봇, 자동화기기 및 관련 기계류의 비교 전시를 통한 국내외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유력

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경제 둔화 조짐을 보

일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인 2012년,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등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왔던 2018년 7월~2019년 말에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6월까지의 개소세 인하 폭을 70%(1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세입 경쟁 과정에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 개소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학기 국가장학금' 내달 3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 오전부터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하는 학자급 지원 구간으로 산정한다.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재학생, 신입생, 편·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대상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5월 이십일간 수출 386억·수입 434억 달러...무역적자 지속

원유수입 84% 증가...사우디 수입 105.9% 늘어

5월 20일까지 수출은 386억 달러, 수입 4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75억 1000만 달러), 37.8%(119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연간 수출누계는 2697억 달러, 수입은 28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7.9%(409억 50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은 28.1%(616억 2000만 달

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이달 48억 2700만 달러, 연간 109억 6400만 달러 적자다. 이달 이십일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5%), 석유제품(145.1%), 승용차(175%), 자동차 부품(83%)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1.3%)는 감소했다. 주요 교육국 중 중국(6.8%), 미국(27.6%), 유럽연합(25.0%), 베트남

(26.9%), 대만(71.9%)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홍콩(31.7%)으로는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원유(84.0%), 반도체(32.3%), 석유제품(40.6%) 등 증가했으나 승용차(13.5%), 무선통신기기(4.2%) 등은 감소했다. 또 중국(37.3%), 미국(21.5%), 유럽연합(3.5%), 사우디아라비아(105.9%), 일본(13.9%)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 러시아(32.2%)에서는 감소했다. /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기름값 급등 생존권 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괄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2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

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목포·박종배 기자